

비핵화 중재

美·北 양쪽에서 불신 당해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며 미북 협상중단 고려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3월 22일 우리의 대북 소통 창구인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가 사흘 후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다. 미국과 북한 모두 파국적인 대화 중단은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협상(제3차 미북정상회담)이 재재하겠지만 시기는 불투명하며 양측 주장의 간극이 너무나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 여론과 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당장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옥식

본회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가 확고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혔다는 것은 여전히 '기만'이란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계정상화 및 안전보장, 제재 해제,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한 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과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미국은 또 비핵화 방식으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물질, 핵시설 등 폐기 대상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단칼'(일시)에 제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래야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원인은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다르지 않게 공유하는 개념, 즉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중국·러시아가 의미하는 비핵화와 차이가 없었던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미국 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상반된 메시지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하노이 회담 결렬 거센 후폭풍

북한은 이날 연락사무소 철수뿐만 아니라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3월 1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핵 단추나 로켓 발사 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 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공개했다. 최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중재자(arbiter)가 아닌 플레이어(player)"라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2월 27-28일) 결렬 3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행동의 '타깃'을 한국으로 삼으면서 미북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큰 도전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을 펴기도 했으나 지금은 '중재자'란 용어도 삼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하노이 회담 '노딜' 직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재개 움직임 등 이상한 징후를 보여왔다. 미 의회 정치문제 전문 일간지 더힐(The Hill)은 지난 3월 10일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즉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으

로 부르는 곳에 북한이 해체하겠다고 다짐했던 엔진 시험시설과 발사대 건물이 오히려 복원되고 있으며 평양 북방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

'비핵화'는 최소한 NPT·IAEA 복귀해야

에서는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북간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미 재무부가 향후 추가로 발표할 대북 제재조치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실시된 강력한 제재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특히 미 의회도 상원·하원, 공화·민주 할 것 없이 모두 추가제재 철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 고농축시설을 빼면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만 사찰을 받고 폐쇄하겠다고면서 미국에게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

제28회 박용운 보도사진 人間愛賞 수상작

대한언론인회는 다음과 같이 2019년 제28회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많이 오셔서 수상자들을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수상작 및 기자〉

◇대 상 : 그래도 나는 팔이 하나 있어 (세계일보, 이재원 기자)

◇우수상 : 각본 없는 드라마 만든 세기의 라이벌 (뉴스 1, 허경 기자)

◇장려상 : 한 명이라도 더 구한다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장려상 : 미세먼지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봉선사 탐방 참가 4월 19일 접수

2019년 봄철 문화역사탐방은 5월 10일 남양주시 광릉 봉선사로 떠납니다. 봉선사는 세조의 능인 광릉을 수호하기 위해 세운 사찰로 춘원 이광수가 머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을 집필한 아름다운 명소로 유명합니다. 참가 신청을 다음 같이 선착순 120명 접수합니다. (최근 2년 이상 연회비 미납자는 제외)

- 다 음 -

■출발 일시 : 2019년 5월 10일 오전 8시

■출발장소 : 프레스센터 앞 신동아 관광버스 3대

■목적지 :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 봉선사

■참가 신청 접수 :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신청방법 : 팩스 02)730-1270,

이메일 kjc1405@hanmail.net 또는 직접 방문.

* 대리 신청, 전화 접수 사절

■기타 : 행사 당일 30분 전 탑승바랍니다.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병대

北核난제...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한반도 일순에 잣더미 될수도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변 강대국을 무시하고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500여 차례, 일본으로부터 500여 차례 침략을 받았다. 물론 우리는 단 차례도 ‘독자적으로’ 외국을 공격해 본 적이 없다. 단지 고려 때 원나라의 일본 정벌 시(1274년, 1281년), 1960년대 미군과의 베트남 참전이 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와 강대국 간의 역사를 운위한 이유는 작금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와는 무관하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담론이 재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 화두는 물론 ‘북핵 문제’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 주제로 등장한 이 문제는 3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백가쟁명식 논의만 난무할 뿐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해 남한은 엄청난 경제사회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참담한 것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종종 전쟁이 운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 이래로 인간은 전쟁을 통해 당면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쩌면 전쟁은 손쉬운 해결책이 될 지도 모른다.

누구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승자는 전리품을 챙길지 모르지만 패자는 너무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인류의 현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너무 잔인한 방법을 회피할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어떤 초강대국이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도 전쟁을 막

지 못했다. 1270년 고려가 몽골의 간접지배 하에 들어간 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전적으로 대륙세력에 편승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이전 만해도 우리 민족은 중국의 한수당금원(초~중기) 등의 시기에 일정 정도 저항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고려 후기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주변 강대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다. 13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중국, 20세기 초~중엽까지의 일제, 20세기 중엽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등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강대국과 깊은 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동맹강화와 영리한 외교로 위기 극복

지 못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실전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북핵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19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그 직전에는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가상 전쟁을 해 봤고, 미군을 포함한 5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섰다.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2년 10월 ‘2차 핵위기’가 발생했고 압박과 대화의 양면책이 도입되면서 북핵문제 해

택만을 기도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피동적이 된 배경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강력한 대륙세력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륙에서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물론 때로는 저항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중과부적이어서 패배를 거듭했다. 안보를 위해서는 자강력 배양보다는 강대국에 편승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우세한 배경이다.

소위 반도국가라고 해서 늘 공격만

독자적인 운명 결정은 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뿐

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이마저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기다렸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북핵문제는 지지부진한 채 끌려오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주제로 부상하였다. 트럼프 정부도 2017년 말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 또한 취소되었다. 가상전쟁에서 많게는 수천만명의 희생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2회의 대북 공격 실험이 우리와는 상의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동맹국의 올바른 선

당하는 것이 아님은 그리스나 로마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반도 국가였지만 매우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대륙이나 해양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강력한 대륙국가나 해양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상황이 달랐다. 고구려나 발해가 한 때는 강성하였으나 중국 본토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대량 보복을 당하여 한반도에 갇히게 되었다. 한반도를 벗어나면 강력한 대륙인 중국이 도사리고 있어서 외부로 팽창할 수가 없었다.

한반도에 고립된 우리 민족은 고려 후기 몽골과의 결혼정책을 통해 안보를 몽골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조선 시대에는 대중 ‘조공책봉’ 외교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것

은 매우 취약하여 대륙세력인 중국이 쇠퇴했을 때는 우리 안보가 붕괴되었다. 구한말 우리의 안보를 책임졌던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우리는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간 것이 증거이다. ‘떠있는 태양’만 바라보다 ‘떠오르는 태양’을 놓친 탓이다.

1945년 8월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으나 일제의 압박을 우리 민족의 손으로 퇴치하지 못하고 연합국의 승리를 통해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단되었고 남북 양측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결정된 순간이었다. 남측은 철저히 미국에 편승한 안보를 유지하고 있고 북측은 ‘자주’를 내세우고 철저히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견지하였다. 북측은 이 연장선상에서 핵생·화학 무기, 대륙간 탄도탄 등을 개발하였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측의 ‘자주 노선’과 미국의 ‘공존노선’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주변국들 모두 ‘부국강병’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시진핑은 ‘명청 시대’의 패권을 연상시키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수립하여 전 세계를 향하고 있고 러시아 푸틴은 ‘짜르시대’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으며 일본 아베는 ‘아시아의 맹주’를 외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는 ‘미국제일주의’를 통해 유일패권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가난하지만 군사강국을 통한 ‘강성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각국의 패권추구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만일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등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잣더미로 변할 것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상이 물려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독자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힘이 없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세계최강이자 영토야욕이 가장 적은 미국과의 ‘연합’과 ‘편승’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대미 편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영리한 외교’를 통해 구한말과 같은 전철을 절대 밟지 말아야 한다. 사족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경제·군사·외교·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1면에서 계속

1차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당시 막후에서 비핵화 협상에 개입했던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Korea Mission Center) 총책임자는 지난 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스탠퍼드대 동문 초청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對)국민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약속했다”고 전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그같이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사기극에 말려든 셈이 됐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실제로

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서로 다른,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다. ‘비핵화’는 NPT(핵비확산조약)에 따라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즉 ‘비핵국’으로 하여금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 안에서는 핵을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을 파기하며 본격적인 핵개발에 돌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에 본격 착수하면서 최초의 국제적인 북핵 동결 조약인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를 파기한 것은 김대중 정부, 만들어 최초의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을 실시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최소한 NPT와 IAEA의 핵안전협정 복귀를 선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北, '굶어 죽으면서 만든 핵'

살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만델바움 교수는 「국가들의 운명」 Fate of Nations 이라는 1990년대 초반에 저술한 책에서 '세상의 모든 독립 국가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듯이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위의 조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한다는 운명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노력, 국가안보에 관한 근심은 모든 독립 국가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그러나 만델바움 교수는 국가들 마다 국가안보 정책은 다르기 마련인데 그것은 국가들이 처한 국제안보 상황이 상이(相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한미동맹 파기·미군철수가 한반도 운명 좌우

만델바움의 주장은 사실은 대부분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미 오랫동안 주장했던 상식과 같은 언급이지만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불리한 국제환경에 처한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국가안보, 즉 국가의 운명에 대해 무심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관점조차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의 운명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100여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국가안보정책 즉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정책에서 실패 한 결과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는 수모마저 겪었다.

그 수모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힘이기보다는 2년 9개월 동안의 격전을 통해 일본 제국을 완전히 격파한 미국의 힘과,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 9일 새벽 0시 대일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의 전승국에 포함되는 행운을 차지한 소련의 힘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애써서 축소하려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결국 해방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단으로 귀결되었고 소련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6·25전쟁을 일으켰으며 당시 남북한 인구의 10% 가 죽는 잔인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명피해 기준 세계 역사상 7번째로 큰 전쟁이 이 비좁은 한반도에서 치러졌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외교의 신(神)이라고도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체결, 한국의 운명에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강대국을 사실상 강제 개입시키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체결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말인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통해 두고두고 덕을 보게 될 것이요' 라는 말은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세계 최악의 호전 집단인 북한의 전면 도발을 막을 수 있었고 미국이 제공해 주는 안보우산 덕택에 경제발전에도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종합국력 세계 12위권의 강한 나라로 성장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은 60년 이상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안보가 마치 저절로 주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안이함과 환상에 빠지게 된 반면, 중국,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북한은 국가안보를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온 국민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온 국민이 무장하고, 전 국토가 요새화 된, 게다가 핵폭탄마저 장착한 막강한 군사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가난한 나라가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은 언제라도 침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나라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살이 뒤룩뒤룩 찢 등치 큰 암소같은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비쩍 마르기는 했지만 늑대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야원 늑대인 북한이 살찐 소인 한국을 아직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안보, 즉 한국의 운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모든 것이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두 개를 확실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날 이후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당시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고 말 한 바 있었다. 북한은 자신이 밤을 굶어가면서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했던 전략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조차도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과 핵폭탄에 대해 전혀 현실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북한에게 먹을 것을 주면 핵을 포기하리라는 생각, 북한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포기하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한다는 등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들이 난무했었다.

북한은 굶어가면서 핵을 만들었다. 살기 위해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미국만 빠져주면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핵심이다. 미국과 싸우면 당연히 북한이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도시 한 두개를 파멸시킬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추는 날 북한은 미국에게 마음대로 해 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된 날, 즉 북한이 앞으로 벌일 조국 해방전쟁에 '미국놈'들의 개입을 막을 수 있게 되는 날 북한은 한국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에서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하려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무지를 한탄했던 것이다.

만약 그 날이 온다면 한국은 핵 무장한 북한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인지' 혹은 '항복해야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참담한 운명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냐? 혹은 유일신과 같은 김정은 독재정권 아래 숨죽이며 살 것인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당면하게 될 수도 있는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필자의 말이 아니다. 국제정치학 최고의 권위자였던 한스 모겐소 교수가 오래 전 핵무기의 효용을 묘사했던 말이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하나는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다른 하나는 미리 항복을 하는 것."

북한이 ICBM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난 60여년 동안 북한이 오매불망(寤寐不忘) 그려왔던 꿈이다. 미국에게 '종전선언'은 'Korean War'를 끝낸다는 선언일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종전선언이란 '조국 해방 전쟁'을 끝낸다는 말 아니겠는가? 김정은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노이 회담은 애초부터 결과를 낼 수 없는 회담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사회는 무슨 스몰딜, 빅딜하며 한쪽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을 북한의 손에 맡길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그리고 급속히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물 샬 틈 없는 공조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북핵은 맞서 싸워 죽을 것인가·항복인가 양자택일 뿐

철수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전략목표가 대단히 정확한 것임을 방증한다.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를 '미국과 싸움하기 위해' 혹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무지(無知)는 결국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결과다. 키신저 박사가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오래 전 말했듯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날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미국의 대도시 한

각하고 핵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치를 '조국통일 대 사변'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은 필수중의 필수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북한이 ICBM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었다.

북한에게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은 미국과 싸우지 않게 해주는 최후의 무기다. 호주의 조과학자 마이클 펨브록은 6·25때 당한 혹독한 경험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폭격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Credible Deterrence)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다. ICBM은 바로

지난 3월 6일, 진행된 북한 노동당 초급선전선동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은 자신을 더 이상 신비화하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수령신비화 종언을 하였다.

김정은, 脫神선언

‘나를 더 이상 신비화 하지 말라’

“만일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품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령은 인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수령의 사상리론도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명학설이고 수령의 령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령도이며 수령의 품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 복무하는 인민적 품모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 속 체제 저항·역동적 자유의식 싹트기 시작

김정은의 이 말을 결국 수령을 사람이 아닌, 하늘이 낸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우상화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더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 수령 신비화에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끼고 더는 자신을 신비화하지 말고, 보통 사람으로, 동지로 여겨달라고 개심을 하였을까?

나는 이것이 외부의 압력과 함께 미국이 힘을 넣고 있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살던 그렇게 순진하고 무뎠던 인민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무부 예산으로 송출되는 7개의 대북 라디오와, 여러 개의 대북 선교 방송들을 비밀리에 열심히 청취하고, 해외 파견 근로자나 여행자들로부터 바깥의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어서 김정은이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목숨을 건 탈북행렬에 서슴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내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역동적인 자유의식 및 체제 저항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들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3월 하순 북한과 두만강을 압록강이 맞닿아 있는 중국 단둥시에서는 김정은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 급파된 북한정찰총국 요원 수십 명이 중국 공안과 공동작전으로 단둥시 교외의 북한 식당 밀집 지역에서 모든 식당을 뒤지며 불시 수색과 의심자 체포소동을 일으켰다. 나중에 알려졌다시피 이들이 체포하려고 한 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장과 그 일행이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있게 될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총화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해서 국장과 그를 따르던 부

하들이 일제히 중국으로 튀었고, 지금까지 북한이나 중국 공안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적 없었던 무장봉기나 기타 소요들이 조직화되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천리마 민방위’는 지난 3·1절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특별 발표한 망명정부수립 선언을 통해, 이제 김정은 정권을 부셔 버리기 위해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반김정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로 이후의



김홍광
K지식연대 대표

북행렬 급증에 놀라서 CCTV를 통한 원격 국경감시를 거두고 군인들이 직접 강변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체포하여 북한에 넘겨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탈북행렬은 멈출 줄 모른다고 하니 어찌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세 번째 사례는 얼마 전 북한 최대의 시장인 청진 수남시장에서 식량점포 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보이콧하는 사태가 사상처음으로 일어났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수십년 간을 허리띠를 조여 매고도 모자라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제재를 더 강하게 받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기 시작 한 것이다.

90년대 대량 탈북사태 재현...무장봉기 가능성도

향방이 기다려지는 대표적인 탈북자 조직이다.

두 번째 사례는 현재 북중 국경 두만강, 압록강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의 숫자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현장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남한으로 입국 하도록 돕고 있는 ‘탈북난민 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의 전언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90년대 말에 있었던 대량 탈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탈북하는 불잡으려고 주민들을 밤낮으로 총질을 해대고 있으며, 중국 변방대도 탈

노동당과 인민위원회가 시장 관리 당국을 시켜, 식량가격 만큼은 5000 원선을 넘지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하다 보니 시장상인들이 폭발한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북한은 식량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단의 가격 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식량을 파는 점포들에 공안원들과 노동자 규찰대를 풀어, 쌀을 팔고 사는 점포마다 얼마를 부르는가를 감시하면서 높게 부르는 점주들에 대해서는 바로 점포를 회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이들에게서 애국하는 마음에서,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서 절대로 쌀값을 높

이 불러, 인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하였다. 이러한 폭압이 일시적이 아니라, 벌써 6개월 째 접어들자 식량점포 주인들은 나라에서 쌀을 사 오든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우리도 싸게 사야, 싸게 팔 수 있는데, 쌀이 절대적으로 없으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라 하면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냐. 나라에서 다 해먹으라고 하면서 한 주일 넘게 점포문을 닫아 식량을 살 데가 없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됐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수십년 간을 허리띠를 조여 매고도 모자라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제재를 더 강하게 받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기 시작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김정은은 새로운 통치 방법으로 구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신비화를 넘어서 보다 정교하게 고안된 수령 동지화가 아닌가 싶다.

그래야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든가, 아니면 중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대량 아사자가 생길 판인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 수령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서둘러 신비화의 병거지를 내려놓았다고 해석된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신비화 종언이 발표된 이상,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하여 “속삭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웅성웅성 의견을 나누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이 또다시 수령 신비화의 만능무기를 도로 꺼내 들지는 모르겠지만, 측근 선전선동 귀재들이 어떤 새로운 신비화의 무기를 만들어 낼지는 몰라도, 수령 신비화를 종언하는 그의 발표는 천년만년 갈 것 같던 북한의 독재체제도 이제 맥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야외활동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자



이광영
본회 회우

미세먼지 공포가 전국을 강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6일까지 연이은 미세먼지 경보로 서울 도심이 마스크 행렬로 뒤덮이는가 하면 정부는 유치원은 물론 전국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조치를 서둘렀고, 국회는 미뤄 뒀던 미세먼지 법안 8개를 3월 13일 딱딱 일괄 처리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과연 이래야 되는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담배 연기보다 해로운 초미세 입자...혈관 타고 온몸 돌아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면서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통틀어 말한다. 이 중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은 크기가 10 μ m(1 μ m는 1,000분의 1mm) 이하인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그중에서도 특히 머리카락 굵기(50~70 μ m)의 20~30분의 1인 2.5 μ m 이하 초미세먼지가 문제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와 달리 폐 안 깊숙이까지 뚫고 들어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곳곳에서 말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10 μ m의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폐 기능에 주로 영향을 주지만 2.5 μ m 이하가 되면 이에 더해 피부병과 눈병, 1.0 μ m에선 암, 0.1 μ m에선 심혈관계 질환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담배연기보다 더 해롭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다. 이

들 초미세먼지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어린이와 고령자, 임산부나 심장질환을 비롯한 순환기 질환자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2018년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는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 숨을 쉬고 있다고 발표했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WHO는 2014년 한 해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시민의 대처방안:

나쁨 단계 발령이 있을 때
(1)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코로 숨을 쉬자.

입으로 숨을 쉴 때 코로 숨 쉴 때보다 서너 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가 폐포(肺泡)까지 내려가 쌓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가능한 한 야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2)외출을 할 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자.

우선 공사장 같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곳을 피한다. 마스크는 식약

처 충분히 조여 줘야 한다. 세탁하면 기능이 상실 된다. 구부리지 말고 원래 모양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3)실내 공기를 잘 관리하자.

실내 공기는 생각 밖으로 오염도가 나쁨 단계일 수 있다. 특히 조리할 때 문제가 된다. 환기장치를 켜고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토록 한다.

종종 물청소를 해서 실내 먼지를 제거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에 있을 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제때에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해야 한다.

(4)물을 충분히 섭취하자.

자동차, 발전소, 공장뿐 아니라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길 때, 쥐불놀이를 할 때, 폭죽 불꽃놀이를 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 생선 등을 구울 때도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가정의 주방과 지하철역 식당가 주변이 의외로 미세먼지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은 양 차곡차곡 쌓이며 농도 짙어져...발원지 차단해야

처에서 인증한 KF지수가 있는 제품을 고른다. 80과 94, 99의 세 가지가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스크 사용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하여야 한다. 94가 무난하나 건강한 사람이라면 99가 좋다. 천식 등 호흡기 지병이 있거나 노인 등 호흡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80을 추천한다. 어린이와 환자의 경우 가정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착용방법이 중요하다.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된다. 탄력밴드가 있어 조일 수 있는 부위가 코로 와야 한다. 사방이 잘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귀 쪽에서 고리를 걸

인체는 하루 500~800cc의 물을 숨 쉬는 코와 입 그리고 피부를 통해 배출한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1,500cc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 날숨으로 내뿜는 공기 속에 포함된 수분은 기관지 점막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준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물을 자주 섭취한다.

(5)외출 후 돌아오면 흐르는 깨끗한 물에 손과 얼굴, 발을 씻자.

-나라가 해야 할 일:

미세먼지 해결은 궁극적으로 발원지를 차단하는 일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매우 다양하다. 자동차, 발전소, 공장뿐 아니라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길 때, 쥐불놀이를 할 때, 폭죽

오늘의 나대로

이홍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특임교수)



불꽃놀이를 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 생선 등을 구울 때도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가정의 주방과 지하철역 식당가 주변이 의외로 미세먼지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바람 세기와 방향에 따라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따뜻한 공기가 지상 쪽의 찬 공기를 누르는 '기온역전'이 일어나고 대기 정체

까지 겹치면, '덮개를 덮어둔 것과 같은' 효과로 미세먼지는 적은 양이 차곡차곡 쌓여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기상 상태에 대비해 평시에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는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런 여러 형태의 미세먼지 발원지를 어떤 식으로 차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크게는 산업구조 조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제이다. 그러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루아침에 똑딱 해결할 수 없다. 포퓰리즘(populism)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혜를 짜야 한다.

소리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제거방안

原電증설·석탄발전 축소분

따스한 햇살 속에 꽃봉우리가 피는 봄이 왔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실업률 속에 경제는 계속 어렵다. 숨쉬기가 두렵고 산책과 외출을 못 하고 실내에만 머무니 우울증만 는다.



박재광
미워스콘신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 증설 강행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옥외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400만명에 달한다. 미세먼지(PM10)는 수시간 동안 10km 정도 날아갈 수 있어 국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2~3주동안 1,000km 이상 날라갈 수 있다.또한 폐 깊숙이 침투하고 순환계까지 들어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는 국경이 없이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기오염 노출도가 가장 높다. 더구나 한국보다 대기오염이 각각 2.2배, 1.3배 심한 중국·북한과 인접해 있다. 대기오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몰려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가 백두대간을 넘지 못하고 충북에 정체되어 올 들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들어났다. 이런 상황인데 취임 후 석탄발전소는 11기가 가동에 들어갔고 7기는 건설 중이다. 2022년 석탄발전이 40%를 넘어선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과 친석탄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더 심화됐다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대신해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 이라면서 30% 미세먼지 감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해결책은 모든 발생원을 찾아 절감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분명한데도 직접적인 감축요구보다 검증 안 된 ‘인공강우’를 중국과 협의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게 일임했다.

그런데 중국 동해안에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은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중국도 정권 차원에서 대기오염문제를 다루고 있다. 베이징시의 시장은 칭화대학 환경공학교수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고에 빠져 눈치 보서는 안 된다. 과거

고 실효도 없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3일동안 150억원을 낭비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하고 복지나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소일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같이 80%의 전기를 원전으로 생산하면 대기오염과 온실가

文대통령 취임 후 석탄 발전 11기 가동...7기 건설 중

에는 중국발 황사를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는 중국에 나무심기를 했다. 이제는 한국의 대기오염 저감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차량2부제, 석탄화력발전 통제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은 택시 지나가고 손드는 것과 같다. 런던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4월8일부터 초저배출지역을 설정하여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차와 2006년 이전의 휘발유차에 매일 17,000원의 번잡세에 19,000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도심청정공기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은 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결정할 것이다.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며, 연탄사용도 제한하고, 자동차도 유럽같이 소형차를 권장해야 한다.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도로계획을 실시하며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이유가 중국 탓 하

스배출 문제는 물론 실업자 문제도 해결된다.

탈원전하는 이유가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라 한다.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그러나 하버드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매년 최대 2,800명에 달한다. 탈원전을 하니 국민을 죽이는 석탄발전을 줄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중국은 비난 못 하고 미세먼지는 인권이 라면서 국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과거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시위하던 환경단체들은 온데간데없고 국가의 지원받는 환경단체만 5배나 늘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다음날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원자력 발전기술은 세계 최고이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한국형 원자로의 외국 업체로는 처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통과 했을 정도로 안전하다.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은 원전기술이 없어 한국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변형해서 60%의 전기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며 34%를 세계에

서 가장 오래된 원전 포함 5기로 생산한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13조원의 수력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 스위스보다 더 신행이고 미국에서는 60년 사용승인을 했는데 고리 1호기는 40년 쓰고 폐쇄했다.

과학을 무시한 환경단체와 정치인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폐기한 것이다. 자연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가 국민을 운택하게 만든다. 이념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경제를 파괴 한다. 우과는 건설하고 좌과는 파괴 하는 행태가 반복 되는 듯싶어 안타깝다.

세계에서 경작 가능한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에서 하천을 재 자연화를 하는 것은 다시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매년 인명사고와 재앙을 받아들이자는 것과 같다.

관리한 방식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버려졌던 하천을 선진국의 하천관리기법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었다. 사기조작이 아니면 보를 파괴할 논리가 없다.현 정권의 주축인 사회·환경단체는 탈산업화, 탈문명화 사고를 교묘하게 포장한다. 재자연화

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이 없으면 동식물도 살 수 없다. 불행하게도 현대인은 마스크를 통한 선

동으로 사기조작에 쉽게 넘어 갈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댓글이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됐다. 일반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절대 선진국가 가 될 수 없다. 전문가가 대접받지 못 하는 사회는 항상 혼돈에 빠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는 퇴보한다.

과거에는 언론인이 지식인의 표본이었다. 민주화 이후 지난 수십년 언론계는 좌경화된 대학조직에서 활동한 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념 투쟁의 장이 됐다. 우물 안의 개구리들 끼리 모여 세상을 논하고 편협한 이념에 근거한 논조로 심지어 거짓도 마다 않고 보도 하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만다.

언론은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언론이 특정 집단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금 언론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한 황희 정승은 “일을 안 되게 하는 것은 쉬우나 일을 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말이 다시금 새롭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4·19는 미완성 혁명 그 정신 받들고 있나

이번 4월은 4·19혁명 돌을 맞는 달이다.

혁명, 듣기 좋은 말이다. 혁명은 가슴을 뛰게 한다. 혁명을 하면 민중이 주인이 된다고 한다. 인민의 삶이 최고가 되는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혁명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벨탑의 신기루처럼 오를 수 없고 허공에 사라지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 촛불혁명 아닌 헌법절차 따른 집권

1960년 4·19혁명은 우리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이었다. 시민,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맨주먹으로 일어나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유혈 혁명이었다.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자 당시에 단군 이래 민주주의가 꽃핀 시대가 왔다고 했다.

혁명 후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신파, 구파로 나뉘어 싸우다 결국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분열했다. 민주당의 장면이 내각제 총리로 집권했으나 정권은 허약했다. 각종 시위도 연일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시위대가 국회의사당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장면 정권은 5개년 경제계획을 세워 경제재건의 의욕을 보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혼란 중에 장 정권은 쿠데타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 채널로 감지하고 있었으나 허술한 방비로 이를 막지 못한 실책을 범했다. 민주당 정권은 결국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 무너졌다. 민주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은 그 능력을 보이기도 전에 이렇게 9개월 만에 무너졌다. 피로 쟁취한 4·19 혁명은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끝났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민주공화당)는 1963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1972년 10월 유신이 제4공화국)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조국 근대화의 신념을 가진 박정희는 중화학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서 세계의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경제를 크게 도약시켰다. 박정희는 한국을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공이 인정되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박정희가 항상 1위로 꼽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1979년 박정희 시해사건 후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가 집권해 더욱 강력한 제5공화국의 군부통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1987년, 넥타이 부대가 중심이 된 6월 항쟁이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제6공화국)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한국은 유사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 가능성을 보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보수,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며 균형 잡힌 양 날개로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의 대립과 동, 서 지역적 대립, 세대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져 극심한 분열을 보이게 시작했다.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란 극단적 좌파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 1980년대 군부 정권에 저항하던 NL계 등 급진 386세대(현 586



러시아 볼셰비키·마오쩌둥 문화혁명 모두 실패작

세대)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조짐을 보였다.

최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의 위기를 초래했다. 지금 그 위기에서 대한민국 호는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에 촛불시위는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류에 올라탔다. 그리고 현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정권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고 감히…”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현 집권당 대표는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언한다. 이 정부가 과연 혁명으로 탄생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촛불 집회 초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격화되어가던 그 집회를 들여다보면 시위 중심 세력이 민노총을 비롯한 과격 좌파단체였던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울도심에서 이곳이 평양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급진적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도 법리상 무리한 점이 많았다. 언론의 선동적 보도는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서는 검증 안 된 언론보도를 짜깁기 한 느낌이 든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 현재의 석연치 않은 판결로 박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다. 현 정권은 5년 임기를 전제로 출범했지만 후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 지난 대통령 선



김광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고용참사 등 더 나빠진 경제사정하에서 고전하고 있다. 탈 원전 같은 무리수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고 4대강 보 부수기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말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 이 혁명을 진압한 승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동학란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 혁명은 우리나라 최초로 농민 등 백성들이 자각해서 일으킨 저항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해 동학군은 진압되어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프랑스 대혁명도 반쪽 혁명에 그쳤다. 혁명 후 온건한 지롱드당과 급진, 과격한 자코뱅당이 집권 경쟁을 벌였다. 집권에 성공한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로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에 보냈지만 그 자신도 실각 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공산혁명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차르를 몰아냈다.

그러나 농민, 노동자들의 세상은 오지 않고 스탈린의 공포정치로 수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모택동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으나 말년 문화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부르는 이상대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실패한 이론으로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마르크스와 다른 공산주의 이론을 펼친 여류 공산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자본축적론’의 저자)는 탁월한 논리와 연변으로 이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펼쳤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김씨 세습왕조 치하에서 굶주림과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진정한 민주혁명은 자유, 민주, 공화 체제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겠다. 이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노력하면 달성하지 못할 것도 없다.

르
포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사라져버린 광화문 광장



심의표

본회 편집위원
전 KBS 부산방송 총국장

4월하면 떠오르는 4·19.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젊은 학생들이 피로 항거했던 민중 혁명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올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우리의 최대 가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갖가지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얼굴 광화문은 온갖 시위대의 물결이 넘쳐나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구호, 극단적인 구호, 욕설까지 난무한다.

주말마다 격정의 현장...참가단체 셀 수 없이 다양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시위의 천국이 됐는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지만, 세계 12위 경제 강국의 수도가 이런 국론 분열 양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더욱이 우리는 남·북 분단의 첨예한 대결 상황 아래 놓여 있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넘어서지 못한다.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는 춘분이 바로 이틀 전, 봄이 한창 짙어질 한낮이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는 전혀 봄이 없었다. 포근하고 한가한 봄기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광장을 온통 뒤덮는 무수한 태극기와 성조기를 비롯해 울긋불긋 나부끼는 각양각색의 깃발과 피켓 물결, 수십·수백 대의 확성기가 쏟아내는 고성과 집회참여자 들이 외치는 함성과 구호,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 노래소리. 거리 행진대를 선도하는 농악대의 쟁과리와 북소리, 밀리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경적소리, 행진대와 멈춰선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의 뒤엉킴과 이를 정리하느라 끊임없이 불어대는 경찰들의 호루라기 소리... 어디를, 무엇을 둘러보아도 봄이 끼어들 틈새를 찾지란 불가능한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촛불집회'가 온통 나라를 뒤덮고, 이에 맞선 '태극기 집회'가 들불처럼 번지기 3년 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른바 "촛불혁명"을 이뤄낸 촛불 집회는 고개를 숙였지만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는 그 규모가 줄어들지도, 그 열기가 식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덕수궁 돌담을 따라 북쪽으로 4~500m만 옮겨가면 동화면세점 빌딩 앞, '일파만파' 본부 텐트가 눈에 들어온다. '국군구국연대'라고 쓴 무대



촬영 : 이철영 편집위원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 외면 자기들 알리고 싶은 집회만 보도

주변엔 여러 이름의 군부대 깃발이 대회를 메우고 있다. 광화문 사거리 맞은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자유한미연합', 바로 옆 건물인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태극결사대' 팀들이 저마다의 집회를 열고 있다. 동아일보사에서 북쪽으로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교보문고 빌딩 앞, 이곳에는 육사25기 장교들이 중심이라는 '자유대연합' 부스가 차려져 있고 바로 옆 KT 건물 앞에는 커다랗게 '자유대한민국국민'이라고 쓴 깃발이 높게 내걸려 있다.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 집회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깃발이 전국 고등학교의 이름들이다. 경북고, 부산고, 송실고, 용산고...

파악조차 어렵다. 집회현장에서 만난 전국고교연합 관계자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조직은 지금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자유대한수호 고교연합' 두 갈래로 나누어서 각종 관련 단체와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루 광화문 일대에서 눈에 들어 오거나 집회 현장에서 나누어 주는 각종 유인물에 적힌 단체 이름만 해도 '무궁화기독총연맹', '대통령복권 국민저항본부(대국본)', '시민열린마당', '박근혜대통령 무죄석방1천만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호국단', '틴라이트', '국군구국연대', '시민단두결의사포럼', '박대통령지킴이아줌마', '자유대한연대', 'ROTC구국동지회' 등 그 끝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한쪽도 둘러본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집회가 펼쳐지고 있다.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반전평화국민행동' 등이 연대한 "3·23 촛불대회" 집회다. 무대 위에서는 연사들의 열변이 쏟아지고 집회장 주변엔 세월호 참상 진상규명, 사법농단 적폐판사 탄핵, 5·18학살왜곡처벌법 제정 등 문구들을 커다랗게 써 붙였다. 집회장 바로 옆, 광장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바

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야당 대표 얼굴을 인쇄한 검정색 전단지를 다닥다닥 붙여놓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 전단지를 밟지 않고 피해갈 수 없도록 해놓았다.

태극기 집회참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빙 둘러싸고 있는 촛불집회장 길 건너편에서는 뽕웅~뽕웅! 상대방 측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불어대는 '충무공의병단' 회원들의 플라스틱 나팔소리가 귀를 찢는다. 용광로 속 쇳물처럼, 화산의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이 섬찔한 분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

‘광화문의 봄’은 언제쯤일까?

대한민국의 얼굴이, 수도서울의 심장부, '광화문 광장'이 2년이 넘도록 주말마다 '분노와 비난과 분열'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 "탄핵

무효!", "문정권 퇴진!", "적폐 청산!" 등 단체에서 만든 듯한 머리띠, 어깨띠 등은 그나마 양반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듯한 피켓내용 중에는 차마 옮길 수조차 없는 섬뜩한 문구들도 수없이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언론에 대한 비난이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신문과 방송은 물론 제도권 언론들은 모조리 태극기 집회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보도로 일관해 왔을 뿐'이라고 질타한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건국 이래 이렇게 큰 적은 없었다.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광화(光和) - 이름대로라면 말 그대로 '빛과 평화'가 넘쳐나야 할 '광화문 광장'!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유서 깊은 광장이 갈등과 투쟁의 상흔을 말끔히 지우고 아름답고 찬란한 봄을 되찾는 날은 언제일까?

한국경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정책의 역행이 성장 망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가 외국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뿐 아니라 외교상 조심스럽게 말하는 국제경제기구까지 한국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해왔고 금년에는 성장을 전망치를 2% 후반에서 2% 중반으로 낮추었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회사와 민간 투자은행은 더 비관적이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간신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경제지표 추락
벼락이 없다

시한폭탄 대량 실업 위기 일촉즉발 초읽기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이유는 세계 경기의 둔화만이 아니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문제를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가까이 인상했다. 경제성장률이 나 몰가상승율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해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실언이 되고 말았다. 반대로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고용이 악화되면서 소비와 성장이 모두 후퇴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IMF관계자는 재정확대를 권고했다.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반가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 투입만 강화하면 부작용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무려 54조원을 일자리사업에 투입했지만 성장과 고용은 악화되었다. 작년에는 19조원 이상 투입하고도 취업자 증가는 10만 명 이하, 그 이전의 1/3 정도로 급감했다. 금년에 일자리 예산을 23조원으로 늘렸지만 마찬가지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노인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5만 명 감소, 30-40대 취업자는 25만 명 감소, 청년 실업률은 25%로 증가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해 경제를 재정중독에 빠뜨리면 대량실업의 위기를 키운다. 시한폭탄처럼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다.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금년 들어 수출마저 격감하기 때문이다. 2월 실업률은 4.7%이지만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이미 5%를 넘어 대량실업의 조짐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조절하지 않으면 자연

업은 폐업이나 자동화 설비로 고용을 줄인다.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도 매출 격감과 인건비 폭등 때문에 조업을 줄이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

대기업이라고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에다 공정경제의 부담까지 져야하기 때문이다. 대업을 적폐로 보는 분위기와 신사업 진출조차 조심스럽다. 정부는 대기업 오너를 불러들여 고용을 늘리라는 압력을 공개적으로 하지만 경영 애로를 건의하기조차 어렵다.

수출이라도 잘 되면 버티겠지만 금년에는 그렇지 못하다. 재고가 쌓이고 적자가 늘어 노동조합의 힘에 눌려 고용조정은 고사하고 고임금-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기도 어렵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눈치

면 대규모 구조조정 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과잉생산과 수요 감소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격감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이 3년째 후퇴해 세계 7위로 밀렸고 금년에는 400만대 생산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과 독일 등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다 내수와 수출 모두 악화되기 때문이다.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는 더 심각하다. 작년에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직장을 잃은 자동차산업 근로자가 이미 50%나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불안의 이유는 자동차 경기악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대전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경자동차로 전환, 자율주행기술 도입,

기에 빠졌다.

노동조합이 전투적으로 선회했고 부산시마저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면서 위탁 생산의 특성상 작업물량 확보도 위태롭다. 완성차만큼 주목받지 못하나 협력업체는 절박하다. 대형 협력업체의 50% 이상은 매출이 감소했고 협력업체 전체로 보면 대부분이 이자조차 감당하기가 벅겁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세계 경제와 기술 환경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했다. 본래 스튜어디스 코드는 민간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지만 한국은 정부가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을 설계하고 적용을 주도한다. 게다가 스튜어디스 코드를 이용해 대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노후생활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기업도 정부와 노동계의 간섭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스튜어디스 코드가 임금인상과 고용보호는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이나 연구개발에

소홀하게 만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도 떨어뜨리게 된다.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의 논리로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민주화, 공공성의 강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한국에서 3가지 모두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변질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책무성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부작용을 키웠다.

경제민주화는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만들고 투쟁 노선을 강화하게해 대기업·노동조합·정규직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을 소외시켰다.

공공성의 강화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지만 지배구조의 허점 때문에 특권 계층을 만들고 노동조합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정책의 역행이 경제를 망친다. 이것이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사상누각 짓느라 세계경제 흐름 못봐

만 보느라 과감하게 의사결정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대기업의 밀동치가 흔들린다.

한국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상누각을 짓는다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들어가고 있고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의 충격으로 경제 위기에 다가가고 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중동은 유가 하락으로, 유럽연합도 영국의 탈퇴문제 등으로 악재가 많다. 그 결과 금년 수출은 1월 -6%, 2월 -11% 감소했다. 3월(1-10일)에 -19%로 감소폭이 커졌고 반도체와 중국 수출은 각각 -29%, -23%로 더 심각하다.

자동차산업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

자동차의 공유화 등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서비스화로의 전환에 성공할지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각종 규제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고 노사관계 불안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투적 노동운동이 경쟁력을 깎아먹고 고용불안을 키우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반 기업정책이 자동차산업을 사면초가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에 수익 악화로 어닝쇼크를 겪었고 금년에는 중국의 북경 공장 조업을 중단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에 패하고 인건비 쇼크에 시달린다. GM대우는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GM의 사업재편 전략에 비추어보면 다른 공장도 미래가 밝지 않다. 르노삼성도 노사관계 악화로 위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대응

고기술, 창의적혁신, 규제개혁이 살길이다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001년에 중국이 무려 1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의 혜택만 누리고 시장개방의 의무는 개도국임을 내세워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였고 이는 협상의 장기화로 이어졌다. 미국은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특유의 경제우위 창출하라

1.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1980년대에 일본 상품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황화론(黃禍論)이 재등장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터라 중국이 WTO의 개도국 우대 조항을 활용해서 수출은 늘리면서 수입은 억제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키우고 자국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불공정무역을 자행하는 것을 국제무역규범의 힘을 빌려서 방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바람과는 반대로 진화하였다. 13억 인구의 광대한 시장을 자국기업에게 특혜적으로 열어주어 수요를 창출해 내고 보조금지급과 수입제한, 외국경쟁기업 배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력을 키운 후에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게 하였다. 국내시장은 중국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교두보이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인가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환경과 노동, 세금행정 등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에 편승하여 중국은 세계 제1의 무역대국으로 도약하였고 GDP는 일본을 추월하여 2위로 올라섰으며 일인당 소득도 1만 달러를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전통적 굴목산업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전기차, 태양광발전, 드론,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제품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5G를 선도하여 4차 산업 혁명에서도 first-mover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볼 때 중국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기술을 도둑질하여 WTO 자유무역체제의 호혜원칙을 저버리는 반칙을 일삼았다. 대미무역흑자를 기반으로 3-4조 달러대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여 미국의 기술기업을 매입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중국이 군사대국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토를 확장하며 중동, 베네수엘라, 한반도 등의 분쟁지역에서 미

국과 대립하는 것도 불공정한 경쟁으로 축적한 막강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이제 중국은 일본이 했던 경제적 도전을 넘어서 군사, 외교안보,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산당 독재와 국가자본주의라는 체제적 이질성은 중국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중국 견제론을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2. 무역전쟁의 전개와 전망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포문을 열었다.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한 무역적자는 없어지지 않으며 중국이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자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국산 값싼

카드를 꺼내 들고 무역전쟁의 휴전 내지는 종식을 바랬으나 약발이 먹혀들지 않음을 곧 알아차렸다. 그래서 부분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항공기 등 미국제품의 대규모 구매라는 당근을 가지고 트럼프를 달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먹혀들지 않고 트럼프는 화웨이의 통신장비 보이콧까지 감행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할지, 미국이 언제까지 무역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양국이 받는 충격의 강도와 인내 의지에 달려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제는 6%성장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물론 인구고령화, 수출에서 내수위주의 성장동력 전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속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미중무역전쟁의 직접적 충격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의 불안이 가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중화민족의 수치라는 특유의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유난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국시장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낮추면서 자력으로 기술굴기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중국몽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는 선에서 무역전쟁은 일단 봉합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일본처럼 주저앉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한 무역전쟁은 언제라도 재발할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중국이 더한층 강해진 국력과 자신감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 미중관계는 무역전쟁을 넘어서 전면적인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국의 대응

중국은 한국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이고 한국부품을 가공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중무역의 최대피해자는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새우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더욱 높은 기술과 창의적 혁신으로 중국이 넘볼 수

없는 한국특유의 경쟁우위를 창조해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일본

중국시장 의존도 줄이고 인도와의 전략적 제휴 모색

생필품을 소비하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중국산 부품을 쓰는 기업의 부담도 늘어나서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잇달아 내어 놓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부과 대상을 늘려 왔는데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중관세부과는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무기이며 양보목록에는 중국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해소,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금지 등 구조적 개선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중국유학생의 축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미국은 트럼프의 감세조치, 규제완화 등 기업우호적인 정책과 순환적인 경기상승에 가려서 아직까지는 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금년부터 경기하락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무역전쟁의 곤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는 미중 모두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민 대다수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국기업을 키우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재선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기까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개혁으로 국민들의 기를 살리고 혼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며 정부만능의 국가운영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적극 진출해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인구규모에서 중국과 맞먹고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안보에서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미, 대일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사드사태에서 여실히 보았듯이 중국은 상습적으로 안보를 핑계 삼아서 경제보복을 무기로 쓰는 나라이다. 중국과 한국의 국력차이를 감안할 때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서 대중관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긴급
논단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의원 만들기...국민은 안 보이나

역 프리미엄 선거법 재협상 불가피

이탈리아의 베니토 뭇솔리니(1883~1945)는 1923년 아서보 법(Acerbo Law)이라는 프리미엄 선거법(Premium Election Law)의 제정으로 파시스트당 독재의 길을 텃다. 이 프리미엄 선거법은 총투표수의 4분의 1(25%) 이상 지지를 받은 제1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한 선거법을 말한다.



이청수
전 KBS 해설위원장/ 전 위싱턴 총국장
관정 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당이 왜?

그는 이 선거법으로 그 다음 해 총선에서 파시스트가 제1당이 되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34석에 불과했던 파쇼당이 일약 총 의석 535석의 3분의 2인 355석을 갖는 절대 다수당이 된 것이다. 프리미엄 선거법이라는 악명이 그래서 붙었다.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다수당에 유리하게 하는 프리미엄적 선거법이 자주 나타났다. 정국 안정이라는 명분이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61년 5·16 이후 1963년의 5대 총선 때 제1당에 전국구(지역구의 3분의 1)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까지 배분하게 한 것도 프리미엄적 선거법이다. 유신 직후 1973년 9대 총선에서는 전국구 대신 지역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의원제(유정회)는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함으로써 프리미엄 선거법과 다를 바 없었다. 1981년 군정시대 11대 총선에서 전국구(지역구의 2분의 1)의 3분의 2를 제1당에 먼저 배정하게 한 것도 프리미엄적 선거법이다. 1992년 14대에서 2000년 16대 총선까지는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비율대로 전국구를 당선시키기에 따라 이전까지의 프리미엄이 없어졌다. 드디어 반 프리미엄 선거법이 된 것이다. 그 이후 2016년 20대 총선까지는 지역구 득표율이 정당투표율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프리미엄은 없었다.

이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대 다수당에는 역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소수당들에 그 프리미엄이 돌아간다. 필자는 이를 역 프리미엄 선거법이라고 부른다. 지난 해 9월 여야 5당은 그 채택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계산이 달라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다시 반대로 돌아섰다.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중

요 쟁점이 됐다. 1여(더불어민주당)가 3소수 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연대하여 제1야당과 대립하는 구도다. 이런 가운데 미래당과 평화당도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당론이 각각 갈리고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 정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비례 의석의 배분이 제한되거나 봉쇄된다. 그 역 프리미엄은 소수당의 프리미

를 완화하고 어느 정도의 지역 의석 균형화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더 손해가 되는 역 프리미엄 현상은 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을 다 채우게 된 정당은 정당득표율이 어떻든 비례대표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할당 의석에 못 미치면 그 만큼만 비례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전체 할당 의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결과 예측이 아주 어려워진다. 변수가 많고 상수도 변수로 바뀐다. 때문에 주도 정당들은 물론 언론들까지도 그 설명과 전망이 헛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나아가 100년 장기 집권을 호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큰 정당에 불리하고 불안한 이런 선거제도를 애써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무슨 꿈수 있나...대립정국 심화되면 피해는 국민의 몫

음이 된다. 역 프리미엄 선거법의 핵심이다. 1여 3소수야당은 역 프리미엄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 반(半)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발 물러섰다. 연동제를 비례의석의 50%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금과 같이 단순 배분함으로써 큰 정당들의 불이익을 반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은 이마저 계속 반대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비례대표제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 270석으로만 의원 정수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립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오는 사표(死票)를 방지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비례대로 골고루 반영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또 싹쓸이와 같은 지역 간 편차

대로 둔다. 그만큼 초과 의석이 된다. 물론 비례의석은 없다. 대신 소수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를 한 사람도 내지 못해도 정당 득표비율에 따른 전체 할당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5% 이상 득표율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구 당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때 거대정당에서 배분받지 못하거나 배분 받고 남은 비례의석까지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역 프리미엄이다. 이 제도는 내각책임제나 연정, 협치가 잘 이뤄지는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돼 있다. 사표방지만을 위해서라면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명부식으로 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독일과 뉴질랜드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면서 사표를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나온 것이다.

이 경우 초과 의석의 발생으로 의원 정수가 20% 정도나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독일의 2017년 총선 결과 하원 의원 정수 608석의 18.5%에 해당하는 111석(초과 의석 46석+균형의석 65석)이 초과함으로써 의원 정수가 709석으로 늘어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초과 의석을 없게 하거나 최소화하고 소수당에 대한 프리미엄을 완화하기 위해 여당과 야3당이 반(半)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새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도 거대 정당들엔 불리하고 소수 정당들에는 유리한 틀은 마찬가지다.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결과 예측이 아주 어려워진다. 변수가 많고 상수도 변수로 바뀐다. 때문에 주도 정당들은 물론 언론들까지도 그 설명과 전망이 헛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나아가 100년 장기 집권을 호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큰 정당에 불리하고 불안한 이런 선거제도를 애써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잘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순수한 생각에서만일까.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 국당이 뒤늦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선거법으로 1여 3소수 야당의 연대가 가능해지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 개혁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 제1야당의 반발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한국당이 최근 좌파 장기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도 그런 시각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정국이 이를 둘러싼 공방으로 대립이 격화해서 정국이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여기서 민주당은 소수 정당들의 의사도 골고루 존중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대 야당의 의사도 더욱 존중하면서 협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당도 그러한 믿음이 갈 때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치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결국은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역 프리미엄 선거법의 역 프리미엄성을 보다 완화하고 초과 의석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하는 대신 관련 예산은 동결하고 의원 특권을 줄이는 등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석패율 제도 같은 것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표방지면 됐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보여선 될 것도 안 된다.

3·1절 시청 앞 광장 짝 메운 살벌한 쇠말뚝들

서울시민 정기 말살하려는 건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3월 10일에 카카오톡으로 한 영상을 받았다. 서울시청 앞의 서울광장에 말뚝이 잔뜩 박혀있는 영상이었다. 화면에서 보기로는, 굵기와 높이가 들쭉날쭉한, 대략 지름이 약 5cm에서 10cm, 높이 약 60cm에서 1m 20cm쯤 되어 보이는 쇠말뚝들이 불규칙하게, 대략 30-40cm 간격으로 서울광장과 그 맞은 편인 작은 광장을 짝 채우고 있었다. 무려 1만 5179명의 독립유공자를 기린다는, 상단에 약 10-20cm 정도의 아크릴 캡에 각 독립유공자의 이름과 생몰연대가 각인된 쇠말뚝이 간격이나 각도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박혀있었다.

신문은 철저히 외면했다...사진 한 장 없어

광장이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닐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축제도 벌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말뚝으로 광장을 짝 채워서 사람은 말뚝들 사이로 간신이 지나다니게 해 놓는 것은 광장의 기능을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말뚝이 가득 박혀있는 광장은 무질서하고 살벌한 기를 내뿜는 것 같이 보이니까지 했다.

서울 시민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것일까? 하는 연상까지 일었다. 광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말뚝들을 언제까지 박아 둘 것이며 동일하지 않은 규격의 쇠말뚝 1만 5000여 개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 혹시 말뚝을 제작, 설치한 기획사는 박원순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업이었을까? 박 시장으로서 3·1절에 태극기 집회를 시청광장 밖으로 몰아내는 비용이라면 몇 억이건 몇 십 억원이건 아깝지 않겠지만 그 돈을 혈세로 납부한 서울시민은 그 낭비가 통탄스럽다.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며칠 후에 그곳에 갔다. 가보니 그 광활한 광장이 (그 광장이 그토록 넓은 줄은 개방되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었다) 함석 같은 재질의 담으로 온통 둘러쳐져 있었다.

담은 거의 3m 높이가 되어 보일 정도로 높고 틈이 하나도 없어서 안쪽을 엿볼 수가 없었는데 그 담을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열린 쪽문으로 들여다보니 말뚝은 모두 제거되었고 드넓은 광장이 온통 고운 모래로 덮여 있었다. 또 어떤 요술이 다음 차례인지?

그런데 서울광장의 이런 변신(?)에 대한 보도를 전혀 본 일이 없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유튜브 방송 딱 1건이 올라와있었다.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그 광장을 지나다니지 않은 시민은 시청광장이 10여일간 쇠말뚝에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살지 않겠는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십자가

시청광장의 말뚝은 나라를 기울여지게 할 만한 사건은 아니고, 요즘—언제나처럼—국기문란 사건이 너무 많아서 보도할 지면이 없었을 수도

리가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여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냈고 군사독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라고 모든 언론이 투철한 사명감에 불탔던 것은 아니겠지만 언론



수시로 변신하는 서울광장. 이곳에 1만여개의 쇠말뚝이 박혔었다. 사진도 찍히지 않았다.

거액들인 설치행위...태극기 부대 몰아낼 의도였는가

있다. 따라서 언론의 직무유기를 들먹일 일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불쾌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진 것이 한 번 뿐이겠는가? 그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했고 언론도 침묵했다는 것은 시민과 언론이 깨어있는 시민,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건국한지 70년을 겨우 넘긴 우리 언론사에서 우리의 언론자유가 만개(라기보다 폭발)했던 적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이다. 4·19 이후의 제2 공화국 때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1980년 '서울의 봄' 때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두 번 다 세상은 무질서했고 언론의 무책임성이 심했다. 그래서 독자/시민들이 염증을 내고 그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반면에 1987년의 민주화는 사실 언론의 공로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무서운 시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폭로를 필두로 언론이 목숨을 걸고 쏟아 낸 5공 비

전반이 자신의 위력을 새삼 인식하고 역사적 사명을 자각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역사의 시계가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혁명,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처럼 역사가 단숨에 한 세기 또는 몇 세기를 후퇴한 사례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명은 간단없이 진전하는 것이라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왕조시대로 되돌아 달음질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2017년 5월 9일 이래 한국의 문명은 2세기는 퇴보했다. 안보, 탈원전, 최저임금, 노동정책, 4대강, 대기업, 의료보험, 교육, 심지어 유치원 정책까지 어느 하나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정책이 있는가?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은 하나 같이 민주정부로서는 취할 수 없는 일이고 민주국민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선왕조도 이렇게 국민을 비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언어도단의

나라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신기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이하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 국민이 다시 조국 대한민국을 탈환하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길은 단합된 국민적 저항 밖에는 없다. 미국이 참수작전이던, 핵시설 폭파이던, 군사적 방법으로 김정은을 제거한다면 이 정권의 힘이 급속히 꺾여서 더 이상 일방통행 독재가 힘들겠지만, 큰 혼란이 수반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단합해서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탈환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힘이 아니면 유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난 2년간 공영방송들이 '어용'을 넘어서 정권의 보디가드 승냥이 역할을 하는 동안 몇 양심적 신문과 한두 개 공중파 방송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제도수정을 유도하려고 무던히 안간힘을 썼지만 이 정권에는 개 짖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은 것 같다.

제도권 언론이 하도 언론의 본분에 역행하니까 많은 지식인, 언론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주류 언론이 채워주지 않는 정보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고 이슈 심층 분석,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건전 유튜브 방송이 많이 있어서 다행인데 근자에 와서 유튜브의 물이 심히 흐려졌다.

'알릴레오' 따위의 좌파 방송이 뛰어들어 장난을 치고 있고, 허황된 정보, 허황된 분석을 남발하는 극우성향의 유튜버가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자칫 독자들을 미혹하고 오도하는 일이 많아졌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신문이 다시 역사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수행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신문도 인터넷의 발달로 독자가 감소하고 방송과의 속도경쟁에서 불리함 때문에 고전하는 줄은 알지만 그러나 신문은 다른 매체가 따를 수 없는 권위와 독특한 매력에 있지 않은가? 신문을 안 봐도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문을 보는 것만큼 교양인으로서의 기본 상식, 교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신문이 하루 안 오면 흥분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흘 신문이 오지 않으면 사막에 버려진 사람 같은 심경이 되지 않는가? 이토록 절박한, 국가의 명운이 위태로운 시기에 신문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매체가 있겠는가? 이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 위기에 신문이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염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야기 17

‘국가원수 모독’과 ‘매국’에 대하여

누가 민주주의 물꼬를 막으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표현·언론의 자유 반헌법적 공격



배보운
변호사
전 헌재 대변인

“특정 기사를 공격하는 것, ‘타깃그룹’을 만들어내는 것, 심지어 인종적인 단어를 써가며 상대를 매국이라 비판하는 것은 파시스트 정당에나 적절한 행보다.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얼마나 가깝게 결합돼 있는 걸까?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지는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자유 언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아시아에서 자유 언론의 3대 보루다. 이걸 한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무엇이지, 공격할 대상이 아니다.” 이는 아시아타임스의 한 외국인 기자가 기고한 논평기사다.

인다. 그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대부분이 인정받고 있던 분이기에 이게 정말 그분의 말씀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거꾸로 돌려 그 ‘국가모독죄’의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더라도, 나 원내대표의 그 연설은 이미 보도된 블룸버그의 기사를 인용하여 언급한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위 국가모독죄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범행을 해야 성립되고,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을 통하여 이 범행을 해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 원내대표의 지적이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여당대표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그 진상을 밝혀 이에 대하여 근거를 들면서 충분히 반박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국민과 외국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더구나 이어서 나온 여당 대변인의 논평은 외신의 기사를 기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격한 것 자체도 문제려니와, 논평에서 언급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의 ‘매국’은 사전적 의미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또는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로 정의되는 말이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을 미국과 동일시하는 말도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 그 기사를 ‘미국의 앞잡이’로 규정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그 논평을 발표한 대변인에게 과연 그런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강으로 삼고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의문이 들게 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모든 정치활동은 우리나라 헌법에 입각하여야 한다. 헌법이 정치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타 림바하는 오늘날 헌법의 정치규범으로서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재판소가 그 규범적 판단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오늘날 독일을 이루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법치국가에서 헌법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으로 존립근거가 없게 된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행태가 더더욱 우려스럽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현행법에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의 기사를 인용하여, “(문 대통령) 더 이상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연설하자, 이에 대하여 여당 대표가 ‘국가원수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 회부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더니,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 기사에 대하여,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그 기사를 쓴 기자 개인에 대하여 공격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하여 아시아아메리칸기자협회(AAJA)는 “언론인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 및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위협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에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블룸버그는 이례적으로,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이 있는가? 현행법에는 없다. 과거 1975년에 제정되고 1988년에 폐지된 구 형법 제104조의2에 국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다. 동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동조 제1항)와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동조 제1항의 행위를 한 때’(동조 제2항)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여기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되므로, ‘국가원수모독죄’는 폐지되기 전까지는 있었다. 그런데 이 국가모독죄는 국민

의 표현행위를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오다가, 1988년 제13대 국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현재, ‘국가모독’ 처벌도 국민 표현의 자유침해로 ‘위헌’

목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출하여,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1975년 12월경 우리나라와 헌법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가, 몇 톤의 대가를 미끼로 군인을 월남에 파병하여 죽게 했다는 등)의 장편시를 작성하여 일본잡지에 게재하여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자가 재심청구하면서 위헌제청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위헌 제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위 구 형법 제104조의2에 대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분리된 국가를 전제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국가가 일정한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외적인 관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



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며 형사 처벌을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

야당 원내대표의 위와 같은 연설에 대하여, 여당 대표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다가 30년 전에 이미 폐지된 범죄이고 심지어 그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까지 난 ‘국가원수모독’의 해당여부를 언급하며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

한미방위조약 체결과정의 韓·美 갈등과 4·19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4·19를 직접 취재했던 조용중 전 연합통신 사장은 4·19 혁명 50주년 기념 관훈클럽 세미나에서 1960년 4월 19일은 노도와 같은 민중의 무서운 저항,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 관료와 군의 배신 등 삼각파도가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날이라고 증언했다. 건국, 6·25전쟁,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등 역사의 변곡점을 탁월한 국제 감각과 미국의 협조로 잘 넘긴 이승만 대통령은 대미(對美) 외교 부조화로 단독 출마 4선 확정에도 사퇴한 것이라고 조용중 사장은 해석했다.

하야 성명 직후 미국은 ‘훌륭한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치켜세웠고 데모 군중은 그가 탄 차를 에워싸고 애석해 했다. 일본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극동 방위 전략을 거부한 대미 강경 외교와 신뢰 할만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방심이 빛을 필연이었다고 정치학자들은 분석했다.

4·19 일주일 전 1960년 4월 12일 경무대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정부가 잘못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직도 싸우고 있으니 본래 선거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부정선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마산이 6·25사변 당시 좌익 분자가 노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산 계열의 책동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 “군·경·검 합동 조사반을 파견하려고 한다”는 문제의 발언을 한다. 이 대통령이 “학생 운동은 누가 하는 것이며 동원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캐묻고 “선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 선거가 없었으면 일이 잘 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다시 부정 선거 여부를 추궁한다.

대통령 질문에 내무, 문교, 국방 장관이 동문

서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까지는 한참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죽여 물에 던져 놓고 정치를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는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본다.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이 없는가?”라며 부정 선거를 세 번째 질문한다. 국방, 체신, 재무 장관 등이 헛소리만 계속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말 하는 것으로는 안정책이 못 된다. 내가 사면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야 결심을 밝힌다.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3·15 부정선거를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4월 19일 많은 학생이 희생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신두영 전 감사원장(4·19당시 국무원사무국장으로 국무회의 기록자)이 경향신문에 공개한 국무회의록의 대통령의 3차례 부정 선거 질문과 장

관들의 대화가 믿어지지 않았으나, 조용중 사장이 공개한 매카너기 대사가 미국에 보낸 보고서로 사실임이 확인됐다.

4월 19일 매카너기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3·15 부정 선거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부인하며 동석했던 국방·내무 장관을 신임한다면 “설마 두 장관이 나를 속였겠느냐?”고 한 말과 함께 “이 대통령이

이달의 논점(論點)



박석흥
본회 주필
전 문화일보 국장



4·19 부상자를 위문하는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월 23일)

민중의 저항·미국의 압력·관료 배신으로 4선 대통령 하야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서 6·25 전쟁 복구까지 미국을 신뢰하고 의존했으나 미국과 한국의 국익 다툼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미국의 6·25 종전 처리와 일본을 내세운 극동 방위 전략에 미국과 싸워 이겨, 국익은 보존했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의 기피 인물이 된다.

1952년 미국의 휴전 검토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자 미국 대사관과 협의한 이종찬 참모총장, 이용문 육본 작전 국장 등이 주도한 쿠데타 모의와 장면 대통령 선출 기획은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일차 무산됐다. 부산 정치 파동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휴전 추진에 북진통일을 고집하고, 반공 포로 석방 등 초 강수를 썼으며 민중 동원으로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휴전 반대에 테일

감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한미 방위조약 체결을 선택, 1953년 6월 25일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이 한국에 급파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다.

이승만은 로버트슨에게 “우리는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와 1945년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에 미국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배반당했다. 현재의 상황은 또 다른 배반 같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40년 전 한국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적들에게 팔릴 바에야 차라리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한 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대한제국이 추구하던

연대 정책의 실현”이라면서 “우리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여러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칼 물고 뿔뿔기’ 같은 ‘벼랑 끝 대미 외교’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군 주둔, 한국군 20개 사단 현대화, 10억 달러 전후 복구 사업 지원 등을 미국이 약속했다.

이 동맹이 북한의 재침을 막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10개 예비 사단을 추가 신설하여 72만으로 증원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상비군으로 핵무기까지 갖춘 군사강국이 되었다.

이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구상은 공산권 침략만이 아니라 일본의 팽창주의에도 대항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후 한국 안보를 지역 안보 체제에 맡기려 했으며 일본이 극동 지역 통합의 중심이 되기를 바랐다. 미국은 일본 중심 극동 전략 구상에 걸림돌이 되는 한일 관계를 개선키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국민으로 초대 회유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방위 조약 체결 후 국무회의는 해방 후 세대 신진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전후 복구 사업·행정 근대화·경제개발 사업 등을 토의하며 정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해외 시장 개척, 경제 개발, 사방 사업, 식목, 주택 건설 등을 주로 논의 했다. 전후 복구 사업이 잘 진행됐지만 이 대통령은 서대문(이기봉)중심의 정치권력 이동과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 제재를 간과해 말년에 하와이에 유리안치(遊離安置)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정치권력을 서대문에 넘길 때 국무회의에서 크게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이기봉이 큰 야심이 없는 사람이니 걱정 말라”고 일축했지만, 3.15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그리고 장관들도 권력이 서대문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부정 선거 추궁에도 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1959년 다울링 대사는 자유당의 부정 선거 기획을 파악하고 원조 조정, 유력 언론의 한국 취재, 자유민주주의 계몽, 한국 경찰 지원 거부를 본국 정부에 건의한다.

실제로 미국 경제 원조가 2년 동안 대폭 삭감 되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1960년초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덫(trap)에 걸린 것 같다”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물과 같다”는 말도 했다. 한미방위조약 체결로 안보는 완벽했지만 정보 차단으로 정치적 불안을 느꼈던 것 같다. 이승만은 한미방위조약 체결이란 큰 산을 정복한 후 대미 신뢰 회복·정치 안정 등 후속 전략을 강구하지 못해, 4·19에 고립무원이었다.

인사이드 저널

Inside Journal

이달의 보도사진

“쓰레기 봉투에 화들짝!”

nature부문
최우수상

광주매일 김애리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이동희)는 제19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spot news부문 우수상에 광주매일 김애리 기자의 “쓰레기 봉투에 화들짝!”을 선정했다.

신문 사설 보기

같은 팩트·다른 시각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면 개혁 요원하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단 민주평화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그제 상무위원회와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진한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엔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53개인 지역구가 225개가 되면 28개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지방 소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노심초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국 26곳 선거구가 조정된 하한선에 밀려 인건 지역구와의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계산법)을 두고 한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밤 기자들과 만나 “산식은 여러 분이 이해 못

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기자)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만하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배제) 선거법’이라고 반격했다.

새로운 선거제가 되면 정의당의 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중에 논란은 증폭됐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투표의 대의성과 등가성을 높이는 한편 정당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당의 누구를 선출시키는지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더 의미 있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국민 앞에 산출 방식을 친절하게 여러 차례 설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다. 정당 지지율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 기준으로 지나치게 유효리를 따지면 선거제 개혁은 출발도 못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이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5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신문 3월 20일자〉

유리한 선거제와 쟁점 법안 연계 처리는 ‘議席 뒷거래’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다루는 정치권의 구도가 ‘1여(與)4야(野)’에서 ‘4여1야’로 바뀌고 있다.

범여 연합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에도 몇 가지 쟁점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하고,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 입장에서 논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 실정에 맞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선거법 처리를 위해 다른 법안들을 연계해도 되는지의 문제이다.

민주·미래·평화·정의 4당은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의석수 증가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완전 연동형 대신 50% 연동형을 도입하고, 비례대표는 6개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등록과 석패율 제도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민 관심이 큰 28개 지역구 감소에 따른 구체적 선거구 확정 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례성 논쟁은 차치하고, 풀뿌리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계파정치 보스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무엇보다 선거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게 문제다.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천재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다.

자의적 6개 권역보다는 차라리 16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는 게 장점이 더 많다. 이런 문제점에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정치 퇴행의 부작용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쟁점 법안과 묶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여당이 사법 개혁 기치 아래 추진하는 이들 법안에는 문제점이 수도룩하다. 연동형 선거법이 처리되면 소수 야당, 특히 정의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쟁점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의석(議席)을 몇 개 내주고 정상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법안에 찬성해 달라는 ‘주고받기’이다.

의석 뒷거래와 뭐가 다른가. 소수 야당의 연계 처리 동의는 이런 오해를 자초한다.

〈문화일보 3월 20일자〉

제28회 박용운 보도사진 人間愛賞 수상작

大賞 ‘그래도 나는 팔이 하나 있어’

세계일보 이제원 차장



열정과 투지를 보여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4년째 사진기자 생활을 하며 다양하고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든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진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도록 노력하는 사진기자가 되겠습니다.

본회가 시상하는 제28회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 대상에 ‘그래도 나는 팔이 하나 있어’(세계일보 이제원 기자)가 선정되었다. 대상인 ‘그래도 나는 팔이 하나 있어’는 지난해 평창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스프린트클래식 경기에서 결승선에 먼저 들어온 팔이 하나뿐인 중국의 위전바오 선수가 뛰어 들어 온 두 팔이 없는 중국 마밍타오 선수의 스키를 벗겨주는 모습을 포착해 따뜻한 인간애를 담은 사진으로 당시 대회장은 물론 국민들의 머리에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고 있는 사진이다.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은 4·19민주혁명 격동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의 기록을 담았던 60년대 사진기자들의 모임인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운)가 1991년에 인간애를 실천하면서 노력하는 후배기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 2007년부터는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가 주관하여 신문의 날을 전후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수상작 선별은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휘) 전 회원이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상위 20점을 뽑아 대한언론인회에서 언론사 사진부장 출신 원로언론인들이 심사·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4월 16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열린다. <정리 : 박문두 편집위원>

수상자 명단

- ◇대 상 : ‘그래도 나는 팔이 하나 있어’ (세계일보 이제원 차장)
- ◇우수상 : ‘각본없는 감동 드라마 만든 세계의 라이벌’ (뉴스1 허경 기자)
- ◇장려상 : ‘한명이라도 더 구한다’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미세먼지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우수상

뉴스1 허경 기자

각본 없는 감동드라마 만든 세기의 라이벌



일본 빙속 간판 고다이라 나오는 자신의 롤 모델로 이상화를 꼽았습니다. 이상화를 앞지른다는 목표로 훈련 한 그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세계최고기록을 달성한 뒤 0.39초 뒤진 기록으로 아깝게 은메달을 차지해 고개 숙여 울먹이던 이상화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위로와 축하를 건네는 모습은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전 세계에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려상 한 명이라도 더 구한다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인간애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0여명이 숨지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환자를 업고 119구급차로 달려가는 긴급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알려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더 많은 시민과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상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장려상

미세먼지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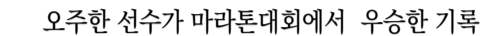


“학교 잘 다녀와” 고노동 미세먼지 속 새 학기 첫 등굣길 스케치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어머니와 자녀가 학교 앞에서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일상화된 미세먼지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미세먼지의 계절, 봄이 찾아오고 있으니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하루 빨리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찾아와 아이들의 미소가 만발하는 등굣길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값진 인간애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국 마라톤 28년만의 올림픽 금야망



지난해 케냐에서 어렵게 한국으로 귀화한 '검은 황영조' 오주한(31, 케냐 명 월슨 로야나에 에루페). 그가 내년 도쿄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을 향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케냐 북부 메마른 사막지역 트루카나에서 맨발로 맨땅을 달리던 흑인 청년 오주한. 그가 약물복용 의혹과 귀화의 어려움, 귀화 선수의 출전 제한 등 역경을 딛고 마침내 '도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입상 위해 기록 단축 맹훈

오늘은 5월부터 케냐 엘도렛 해발 2000m의 고지 캅타갓의 훈련 캠프에서 도쿄올림픽 마라톤 메달 획득을 향한 강훈에 들어가게 된 것. 캅타갓 훈련 캠프에는 이탈리아의 로사 군단, 네덜란드의 호스 군단 등 세계적인 7개 마라톤 팀들이 올림픽 우승과 세계기록 경신을 위해 연중 훈련을 하고 있다. 오주한이 1년 4개월 뒤 열리는 도쿄올림픽 남자마라톤에서 황영조가 이룩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광을 28년 만에 재현할 수 있을까?

2011년 백석대 오창석 교수와 운명의 만남...한국 귀화 추진

1988년생인 오주한이 마라톤에 입문한 것은 20살 때인 2008년. 고향에서 홀어머니, 누나, 형과 함께 소와 양을 치던 그가 3년의 훈련 끝에 2011년 8월 케냐 몸바사 마라톤에 나가 우승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케냐 선수의 대리인으로 활약하던 백석대 오창석 교수(57)를 ‘운명’처럼 만난 것. 마라톤 선수출신으로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국가대표 김이용 등을 지도했던 오 교수는 오

주한을 두 달 뒤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우승시켰다. 오주한은 다음해 3월 서울국제마라톤과 10월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도 거꾸 정상에 올라 세계 랭킹 10위권의 마라톤 스타로 떠올랐다.

이때만 해도 잘 나가던 오주한은 아버지처럼 따르던 오 교수에게 한국 귀화를 부탁했고 이를 추진하던 중

놀라게 했다. 이 기록은 그해 세계랭킹 8위의 대기록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귀화해 리우 하계올림픽에 나가려는 그의 꿈은 끝내 좌절됐다. 여론조사결과 74 대 26으로 귀화 찬성이 절대 우세였으나 검은 피부와 약물 복용 전력을 묻고 늘어지는 세력의 반대가 거셌다. 두 번째 난관이었다.

3월 귀화 선수 출전 제한 규정 풀려 올림픽 참가 가능

2018년 7월, 오주한의 특별 귀화는

5월부터 케냐 훈련 캠프에서 2시간4
분대 겨냥한 강훈 돌입

이제 오주한은 내년 5월 이전 2시간 11분 30초의 올림픽 참가 기준기록을 통과해야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이나 10월 경 주 동아국제마라톤이나 베이징 마라톤에 도전, 참가자격을 확보할 계획이다.

2년 전 2시간 5분대의 기록을 세웠던 그이기에 기준기록은 가볍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주한이 세계의 강호들이 대거 몰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케냐의 캠포캅 캠프에서 2시간 4분대의 최고기록을 겨냥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내야 한다. 오주한의 대리인 오 교수도 소속대학에 휴직계를 내고 케냐에 상주하면서 오주한의 지도와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케냐 2000m 고지에 훈련캠프 설치한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았다
가 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복용
수시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2
년간의 출전정지 처분은 그에게 첫
번째 난관이었다. 약물 복용 의혹에
도 그는 훈련에 정진, 2년여의 공백
을 딛고 2015년 3월, 2시간 6분 11초
의 좋은 기록으로 서울국제마라톤에
서 우승했다. 재기에 성공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을 상습 복용했다면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기록이라고 평
가했다. 그는 2016년 3월 서울국제마
라톤에서 2시간 5분 13초의 대회최
고기록으로 우승, 다시 한 번 주위를

갑론을박 끝에 대한체육회를 통과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발목을 잡았다. 귀화 후 1년이 지나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규정을 3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에나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2020년 도쿄 올림픽에는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난관이었다. 이에 대한육상연맹은 오주한이 2015년부터 청양군청으로부터 받은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IAAF에 보내 이의를 제기했고 3월 15일 오주한이 올림픽 등 국제대

서울국제마라톤 여자부 우승한 ‘악바리’ ‘밀리면 죽는다’ 손등에 쓰고 뛴 안슬기

2019 서울국제마라톤대회(3월 17일 · 광화문-잠실) 여자부 국내 1위를 차지한 안슬기(27 · SH공사 · 사진)가 왼쪽 손등에 쓰고 뒀던 짧지만 강렬한 문구(사진)다.

“대회 당일 오전 6시 30분쯤 숙소인 홍은동 힐튼 호텔을 떠나기 전 각 오를 다지기 위해 제가 매직펜으로 손등에 썼습니다.

42.195km를 달리며 한 번도 손등을 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저를 성심껏 지도해주신 장동영 감독님, 김천성 코치님도 계속 떠올리며 뛰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는 좋았다.

2시간 27분 28초. 한국기록(2시간 25분 41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종전기록(2시간 28분 17초)을 49초 단축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 기준기록(2시간 29분 30초)도 가볍게 통과, 이번이 없는 한 내년 8월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 도심을 달릴 수 있게 됐다.

안슬기는 국내 여자마라톤계에서 ‘악바리’로 불린다. 그는 2016 서울국제마라톤에서 발바닥이 찢겨져 흰 양말이 피로 물들었는데 악착같이 선두를 지키며 우승(2시간 32분 15초)했다. 작년 대구국제마라톤(국내부)에서도 레이스 도중 오른쪽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자 옷핀으로 찔러가며

괴벽벽이 된 상태에서 개인 최고기록으로 우승하는 근성을 보였다. 작년 7월 여자 1만m에서 32분 33초 61로 13년 묵은 한국 기록을 경신한 그는 자신감에 넘쳐있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제 기록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더 노력해 도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리면 죽는다’는 손등 글이 눈길을 끈다.

특별 인터뷰

‘충남 알프스’에 마라톤 바람 김돈곤 청양군수 국내 최대 마라톤팀 창단

칠갑산과 성태산, 비봉산, 구봉산 등 빼어난 산세와 금강, 무한천 등이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한 충남 청양에 ‘마라톤 바람’이 일고 있다. 마라톤 마케팅의 중심에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로 제42대 청양군수에 당선돼 취임한 김돈곤 군수(62)가 있다.

글·이종세 본회 부회장

케냐에서 귀화한 오주환으로 봄 일으켜 유망주 6명의 국내 최강 육상팀 출범



김돈곤 청양군수

“충남은 이봉주 선수를 배출하는 등 마라톤과는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여기에 케냐 출신의 세계적인 마라토너 오주환(31·케냐명·월슨로아냐에 에루페)이 청양군으로 특별 귀화해 마라톤 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청양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김 군수는 취임과 함께 대한체육회와 법무부에서 몇 년간 끌어온 청양군청 소속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의 특별귀화를 마무리했다. 그에게 ‘오주환(吳走韓)’이라는 한국이름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11월 9일. 오주환이란 이름은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이다. 이에 앞서 10월 7일 2018년 칠갑산 전국 마라톤대회를 창설, 첫 대회를 치렀고 올해는 9월 22일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김 군수는 4월 8일 4명의 마라톤 선수가 주축이 된 청양군 육상 선수단의 정식 출범을 위해 창단식을 갖는다. 이래저래 그에게 ‘마라톤 군수’라는 별명이 붙을 판이다.

지난 3월 17일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대회의 결승점인 잠실운동장의 기자실에서 김 군수를 인터뷰했다.

-군수 취임 1년도 안 되는데 그동안 마라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창시절 육상 선수라도 하셨나요?

“아닙니다. 운동으로 배구, 농구, 탁구 등 구기는 즐겨했지만 육상은 소질이 없어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라톤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매년 11월 개최되는 뉴욕마라톤의 경우 2억 달러(약 300억 원)의 순익이 뉴욕시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밖에 런던, 베를린, 시카고 등의 마라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청양에는 오주환이라는 케냐 출신 마라토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국제마라톤에서 네 번 우승했고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는 세 번이나 우승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하면 말할 것도 없고 메달권에만 들어도 청양의 마라톤 마케팅은 엄청난 과급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오주환의 귀화는 대리인 오창석 교수의 영향

-케냐의 에루페가 지난 몇 년간 청양군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지난해에는 한국에 특별귀화까지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예. 오주환은 2015년부터 계약금 없이 매년 6000만 원의 연봉을 청양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연봉에 비해 홍보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주환이 청양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대리인으로

숲길을 올레길로 개발...생활체육 훈련 시설로 활용

청양 출신인 오창석(57)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케냐 마라톤 선수들의 한국 마라톤대회 참여에 관여해온 오 교수가 2011년 오주환을 발굴해 그해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을 뛰게 했고 오주환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2012년 서울과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거꾸 정상에 오르자 그 때부터 귀화를 추진, 작년여야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주환은 오 교수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됐고 귀화를 앞둔 2016년 한국이름을 지으면서 자연스레 오씨의 성을 갖게 됐습니다. 오주환이 청양 오씨의 시조가 된 것이지요. 오는 7, 8월 경 한국으로 이주할 오주환의 가족(부인과 1남1녀)은 오 교수의 청양군 정산면 자택 옆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기거할 것입니다.”

도를 올레길로 개발...생활체육 마라토너 훈련시설로 활용

-청양의 마라톤 마케팅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에 다른 지자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망은?

“우리나라에는 약 500만 명의 마라톤 동호인이 있고 이중 50만 명의 마니아가 국내 400여 개의 크고 작은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어도 5만여 명이 매년 오주환과 함께하는 마라톤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70%가 산악인 청양군은 뛰어난 산세 때문에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데 기존의 임도(林道)를 제주처럼 올레길로 개발, 산악훈련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오주환의 마라톤 교실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강변 도로를 전국의 생활체육 마라토너들에게 마라톤 코스 및 훈련시설로 제공하

또 충남은 여자부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기록(2시간48분13초)을 수립한 임은주(1983년부터 동아마라톤 3연패)와 1988년부터 동아마라톤을 5연패한 이미옥 등을 배출했다. 김 군수가 청양을 ‘마라톤의 메카’로 조성하려는 데에는 이 같은 연고와 배경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청양군 육상단을 국내 최강으로 키울터

-4월8일 창단하는 청양군청 육상단 규모는?

“오주환이 핵심 멤버입니다. 여기에 케냐의 폴 킵코리르, 아이삭 키플라갓, 우리나라 민진홍 등 마라톤 선수 4명과 경보선수 1명, 여자 멀리뛰기 선수 1명 등 모두 6명의 선수로 출범합니다. 연간 5억 원의 예산으로 청양군 정산면 광생큰길로에 마련된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전국체전 등 국내대회에 물론 국제대회에도 참가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8월 도쿄올림픽 마라톤 입상을 위해 5월부터 케냐 현지에서 외국의 강호들과 강화훈련을 하게 될 오주환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 선수를 보강하고 일본의 실업 육상팀 처럼 외국선수도 영입해 국내 최강의 육상단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 비봉면이 고향으로 충남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김 군수는 1979년 비봉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충남도청 기획담당, 문화예술과장, 농정국장 등을 지낸 뒤 2016년 자치행정국장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38년간 충남도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인 이광자 여사(57)와의 사이에 1남1녀.

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범시킨 칠갑산 전국마라톤대회를 몇 년 뒤에는 국제대회로 승격시켜 청양을 세계에 홍보하고자합니다.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이 청양을 찾게 되면 숙박 및 음식점소의 호황은 물론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등 청양 특산물의 매상도 크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충남은 마라톤의 고장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준우승에 이어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봉달이’ 이봉주(한국기록 2시간7분20초 보유자)를 비롯 1970년대 동아마라톤에서 두 번 우승한 박원근, 1984년 2시간15분벽을 처음 돌파한 이흥렬, 2010년 광주우 아시아경기 우승의 지영준 등이 충남 출신이다.

언론인 단골맛집 3

다동 湧金屋 큰집

3대 87년의 손맛 농익은 **추탕**

이향숙

본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언론인치고 서울식 추어탕 전문집인 다동 용금옥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 같다.

다동의 용금옥 신동민 사장(57)을 만나러 가는 20일 오후, 마침 단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먼지를 씻어내는 보슬비라니 참 반가웠다. 문득 상호의 뜻을 생각했다. 湧(용)은 ‘샘솟다, 물이 끓어오르다, 성하게 일어나다’라는 뜻이다. 즉 상호는 돈, 금이 솟음치라는 의미인가. 미꾸라지가 뿔 속에서 솟음치듯이 미꾸라지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게다.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1932년 창업...식당 허름해도 고객사랑 철학 담겨

1932년 일제시대에 신석승, 홍기녀 부부가 무교동 지금의 코오롱 빌딩 자리에 개업한 87년 역사의 용금옥은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60년대 초 지금의 다동 자그마한 한옥 집으로 옮겼다. 홍 할머니는 이곳에서 1981년까지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만 50년간 서울식 추어탕을 요리했다.

추어탕은 남원식, 원주식, 서울식으로 나뉘는데 재료와 조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서울식은 유부와 두부, 목이버섯을 넣으며 맵지는 않지만 뒷맛이 칼칼하다.

남원식은 우거지와 들깨, 고추가루를 넣고 얼큰하다. 홍 할머니의 뒤를 이어 잠시 큰 며느리가 운영하다가 97년부터 현재의 손자 신동민 사장이 다동 큰집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동생은 동대문 쪽에서 작은집 용금옥을 개업해 성업 중이다.

“할아버지는 한량이셨고, 작은 아버지 두 분도 한량이셨어요. 장남인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구요. 대가족의 살림을 꾸려야하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창업을 단행하신 거죠. 할머니는 지금의 삼성빌딩 옆 자리에 있던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수시로 손자들에게 나눠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용돈을 받았던 손자 신 사장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전업했는데 샐러리맨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맛집이 별로 없던 그 시절, 용금옥은 단골이 많았고 그들의 만남의 장, 사랑방이었다. 단골들 중엔 정치인 언론인 문인들이 많았다. 조병옥 박사, 전 국회의장 이만섭, 언론인 이관구(본회 초대회장), 선우휘, 이용상, 최상덕, 고정훈, 홍종인, 만화가 김용환 등이 단골이었다. 문인 중엔 변영로, 박종화, 김팔봉, 오상순, 김성환, 정지용, 구상 등이 자주 찾았다. 특히 이만섭 의장은 작고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던 단골이었다.

근래에도 가까운 조선일보, 동아

일보, 서울신문의 전 현직 기자들의 발길이 잦다. 이병대 본회 회장을 포함, ‘나대로’ 화가 이흥우(본회 편집위원), 한영섭, 안평선(전 KBS 춘천 방송총국장), 김성령(전 경향신문) 등 많다. 이 중 이용상은 1993년 <湧金屋 時代>라는 책까지 출판했다. 이 책에는 이용상이 만주에서 항일 투쟁하고 귀국,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형이 시인 정지용과 중국 부대 전우인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 김영주까지 셋을 우연히 만난 곳이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더욱 용금옥을 사랑하게 된 사연을 기록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만이 아버지”로 스스로 불렀던 기자였다.

연예인 단골도 많다. 탤런트 박상

그 후에도 할머니는 “그렇게 건강한 이가 왜 세상을 떠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라고 안타까워했다.

6·25 말기 휴전회담 때 북측 대표단 통역인 김동석은 고대 교수였다가 월북한 사람인데 휴식 시간만 되면 서울 기자들에게 홍기녀 사장의 안부를 물었다. 기자들은 도대체 용금옥이 어딘지 관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 더욱 알려지고 기자들의 출입처가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후 1973년 서울서 열린 남북조



조병옥·이만섭·이관구 등등 언론·정치·문인들 단골 출입

면, 지상옥, 심은하 등이 자주 찾는 단골. 오랜 역사와 단골이 많은 덕에 애교소드도 많다.

유석 조병옥 박사와의 일화는 유명하다. 단골 조 박사가 미국으로 치료차 떠나기 전날 용금옥에서 추어탕을 두 그릇 먹었다. 그 모습을 본 홍 할머니는 “그렇게 식성이 좋으면서 어디가 아파 미국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조 박사는 대답 없이 떠나 미국 윌트리지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불행하게도 시신으로 귀국했다.

시신이 돌아온 날 홍 할머니는 점포 문을 닫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절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한 북한측 대표 박성철 부주석이 “용금옥 아직도 잘 있음네까?”하고 물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용금옥은 그냥 오래된 맛집은 아니다. 거기엔 87년간 만들고 지키고 연구를 거듭하고 고객을 사랑한 3대 주인들의 철학이 들어있다.

창업자 신석승은 한량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매력과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어른이었다. 그는 운명할 때 몇 년간 모아온 외상전표를 모두 태워 없애라고 유언했다. 세 아들은 유언대로 했다.

홍 할머니는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가면 절대로 값을 깎는 일이 없었고, 공짜를 바라거나 남의 덕을 보려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하되, 남에게 베풀자는 게 철학이었다.

“저도 그 분들 정신을 계승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후대에 물려주려 합니다.” 신동민 대표의 각오다.

식당은 넓지 않고 40석의 작은 규모지만 점심시간이면 한참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다. 작은 한옥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데 오랜 단골들에게 낯익은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하는 식구는 신 대표와 3명의 종업원 등 4명. 오전 10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그 사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쉰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다음날 쓸 재료 준비에 바쁘게 움직인다.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주는 것과 통으로 주는 두 가지가 있다. 뚝배기 추어탕 한 그릇에는 미꾸라지 10마리가 들어간다. 맛의 비결은 국물에 있다.

24시간 동안 은근한 불에 소양과 양지머리, 곱창을 푹 고아서 우려낸 곱국을 밑 국물로 사용한다. 하루 150인분 정도 매출하는데 미리 준비한 재료가 떨어지면 더 주문을 안 받는다.

큰 뚝배기에 넉넉히 담아서 산초와 대파를 넣고 국수와 밥을 말아서 먹는 용금옥의 추어탕은 돈이 솟음치기 바라는 뜻의 상호와 달리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베풀다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이 시대 마지막 맛집이 아닐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종문 회우 별세



정종문 회우(전 동아일보 논설실장)가 3월 4일 밤 질병으로 별세했다. 1938년생으로 향년 82세. 고인은 1963년 2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외신부, 지방부 기자를 거쳐 외신부 부장과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실장, 동아일보 통일연구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를 맡기도 했다.

유가족의 감사 인사

이번 저희 아버님(고 정종문) 장례식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병대 회장님을 포함, 대한언론인회 많은 회원분들께서 찾아주셔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대한언론인회에서 마련해주신 아버님 영결식을 통해 저희 가족 모두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종문 유가족 인범 다희 재원 올림

추도사

천상에서 복락 누리소서

왜 말이 없으십니까? 왜 웃지 않으십니까?

정 실장, 지금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모여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온화하면서 마음이 너그럽고 생각이 깊었지요. 말문을 열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나갔던 달변이었던 상대방의 견해가 옳다 싶으면 승복하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아량이 있었지요. 고등학교 시절 특히 영어를 잘 하고 미남이어서 여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정 실장. 정 실장, 이 자리는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께서 주관해서 거행하고 있는 추도식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온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정 실장은 대학졸업 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 외신부장·워싱턴특파원, 논설실장과 이사 대우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오직 한길을 걷은 참 언론인이었습니다. 정 실장의 문장은 과장과 허식 없이 간결했지만 함축성이 있어 읽은 후 여운이 오래 갑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물론 동아일보의 성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 실장, 그토록 당신을 무녀독남 독자로 애지중지 키우신 어머니 곁으로 가시는 구려. 초등학교 때 “귀한 내 아들, 찬 도시락밥을 먹일 수 없다”하 시면서 매일 더운 점심밥을 지어 머리에 이고 학교를 찾아오셨다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길로 떠나시는구려. 가시는 길 부디 부디 평안하소서. 이승의 일 모두 잊고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복락을 누리소서.

장성원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사진 : 박문두 편집위원

4월 청명한식 산책

孝心 되새기는 佳節



이한우 화백의 ‘아름다운 우리강산’

춘풍화기 화풍난양의 기맥이 통하는 중춘(仲春) 4월로 접어들었다. 사맹월(四孟月) 화신(花信)의 절기, 5일은 청명이고 토요일인 6일은 한식이라 올해도 조상님 산소를 찾아 효심을 되새기는 성묘 효행(孝行) 나들이가 전국에서 이어질 것이다.

식목일과 겹치는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고, 한식은 불을 피우지 않고 전날 마련해 둔 찬 음식을 먹는다는 날이다. 흔히 청명 다음날 한식이 들기 때문에 구분 없이 청명한식이라고 부른다.

청명한식에 성묘하는 풍습은 신라 때부터라고 한다.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을 봉행하며, 문중마다 향사(享祀)를 올렸다. 그래서 한식을 설, 추석, 단오와 함께 4대 명절로 꼽았다. 이때는 지상에 있는 신(神)들이 하늘로 잠시 올라가는 절기라,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 ‘손’이 없다 하여 특별히 태일을 하지 않고도 산소를 돌보거나 이장(移葬)을 해도 좋고, 묘 자리 고치기, 비석 세우기, 집 고치기를 비롯해 아무 일이나 해도 무난하다고 여긴다.

옛 풍습에는 청명이 들어있는 날을 전후하여 15

일 동안을 5일씩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오동나무의 꽃순이 피고, 중후(中候)에는 종달새가 나타나며, 말후(末候)에는 무지개가 보인다고 하였다. 청명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농사가 잘되고 풍년이 들지만, 날씨가 나쁘면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촌마을 사람들은 청명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어종(魚種)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원하였다고 이른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청명한식에 나무를 심는데, 특히 이날 심는 오동나무는 ‘내 나무’라 하여 딸이 출가할 때 장롱을 만들어줄 재목감으로 삼았다.

한식의 기원은 중국 진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전한다. 개자추는 문공(文公)과 19년간 망명생활을 함께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충심으로 보좌하였다. 그러나 군주가 된 문공은 개자추를 잊어버리고 등용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개자추는 면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는데, 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문공이 불려도 나아가지 않았다. 문공은 개자추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으나, 그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고 한다.

개자추의 충성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애도의 뜻으로 이날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는 말과 함께, 옛날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불을 새로 만들어 쓰도록 권했다고 전한다.

〈동국세시기〉에, “이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이 불을 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문무백관과 전국 360개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이를 임금이 내리는 불이라 ‘사화(賜火)’라 하였다.”고 밝혔다. 백성들이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늦게 오는 바람에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었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유한준 : 본회 편집위원〉

회우 동정

文協 상벌제도위원 선임



장석영(본회 부회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회우는 3월 18일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제27대

상벌제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4년. 장 회우는 시인 겸 수필가로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이기도 하다.

미수기념문집 출판기념회



박기병(본회 상담역) 회우는 미수를 맞아, 미수기념문집 ‘격동의 수레바퀴 언론의 길 60년’

출판기념회를 오는 4월 26일 12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주최로 개최한다. 박기병 회우는 대한통신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하여 한국기자협회장(10대와 17대 두 차례), 춘천 MBC, 강릉 MBC, GTB 강원민방, 구로케이بل TV 등 4개 방송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코레일 관광과 협약



김인규(전 KBS 사장, 현 경기대 총장) 회우는 철도 서비스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코레일

관광개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대 평

생교육원은 철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규과정을 신설했다.

새 회보 편집인에 선임



문인수(전 KBS 강릉방송총국장) 회우가 2월 총회에서 사우회 회보 신입편집인으로

선임됐다. 문 회우는 8년간 회보 편집위원으로 성실히 일해 왔는데 4월호부터 업무를 보게 됐다.

3·1운동 주재 강연



이태영(본회 감사, 전 중앙일보 체육부장) 회우는 3월 6일 보훈처가 3·1운동

국가유공자 가족 40명을 초대, 천안행 열차한 칸을 전세 내어 천안독립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그 열차 안에서 독립운동의 의미에 대해 강의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 이 감사는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로서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인 남북 이길용 기자의 아들이다.

제 11회 정경문학상 수상



원행스님(본회 명예회우, 조계종 대종사)은 3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제11회 정경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스님이 저술한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 정경문학상은 출판사 ‘에세이스트’의 최초 편집인인故 정경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 매년 뛰어난 수필가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본회 인사

이종세 부회장 선임



이병대 회장은 공식중인 부회장에 이종세 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 부회장은 동아일보 체육부장을 거쳐 대한체육회 편집위원장, 자문위원, 그리고 한국체육연론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자문위원,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 위원장이다.

본회는 장석영 부회장을 회원 증가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선임했다.

장 부회장은 3월 18일 비회원 회보 정기구독자 7명을 접수했다. 그분들은 김성의, 이재석, 신용길, 홍계현, 홍경민, 김성일, 최영호 등이다.

연회비. 찬조금. 평생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2019. 2. 21~ 2019. 3. 20 납부)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연회비

강두모(19), 박승구(19), 김창구 (19), 조천용(17), 김정삼(18), 최귀조(19), 유무정(19), 김무중(19), 구만완(19)

찬조금 50만원



대안언론인회 중흥에 앞장섰던 고 이해복 회장의 미망인 방봉세 여사가 대한언론인회에 찬조금 50만원을 기탁했다.

방 여사는 대한언론인회의 발전을 고인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안전산행 기원 시산제

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최귀조)는 춘분인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북한산 향로봉 자락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경조사

- ◆ 김승웅 부인상(3월 1일)
- ◆ 김영길 2녀 상(3월 21일)

- ◆ 임종건 딸 결혼 (3월 30일, 명동성당)

연락처, 주소 변경

이인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387 시티파크 201동 3103호

안홍렬 서울 동작구 만양로 6, 104-405(상도노빌아파트)

김영환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430 608-204

언론가 소식

韓·英 공동 언론 세미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한영 언론세미나’를 3월 12일 오후 2시 ~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대구에 구상 시인 시비



고 구상 시인의 시비 제막식이 4월 2일(화) 대구 고모역에서 열렸다. 시비에는 구상 시인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 <고모역>이 새겨져 있다. 고

모역은 방송작가 유호 선생이 가사를 쓰고 박시춘 선생이 작곡했으며 현인 선생이 노래한 ‘비내리는 고모령’의 무대이다. 구상 시인은 영남일보 주필과 편집국장,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이다. 본회 유자효 편집위원장은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장이다.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4월 4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언론계 인사 등 언론인 200여명이 참석한다.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

최은희 여기자상 운영위원회는 일제시대 암흑기의 여기자였던 최은희

를 기리는 제36회 여기자상 시상식을 5월 15일 갖는다.

해외연수 언론인 선정

성곡언론문화재단(이사장 한종우)은 2019년 언론인 해외연수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 발표했다. 이 심사에는 본회 장석영 부회장과 유자효 편집위원장이 참여했다. 재단이 지원하는 연수 기간은 1년으로, 선정된 기자는 다음 같다.

- ◆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 스쿨 : 최창규(MBC), 김희용(KBS), 오수현(매일 경제)

- ◆ 일본 게이오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 박동미(문화일보), 이상현(연 합뉴스)

월간 대한언론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편집위원장 柳子孝
- 주 필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교 열 국 장 俞漢俊
- 광 고 국 장 金祖永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 입니다

국민은 안전한 공항을
원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불편한 진실

- ① 고정 장애물, 짧은 활주로 이착륙 매우 위험
- ② 소음직접 피해 약 2만가구 지역민 반대극복 어려움
- ③ 평강천 인근 철새 서식지 환경 급변 심각한 환경 훼손
- ④ 활주로 6.7조원+장애물 제거 2조원 세금 낭비
- ⑤ 소음으로 야간(23~06시)운행불가 24시간 운영 불가능
- ⑥ 주변 개발 및 도시화 미래대비 확장 불가능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
방송, 통신, 광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더 큰 내일을 이끌어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